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 공동체 그리고 자유

- 일시: 2020년 5월 27일 (수) 오후 4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자유와 지성

◆ 정말 유럽은 실패했을까?

김영준 SFL KOREA 대표

◆ 코로나19와 전체주의의 위기, 해법은 어디에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 코로나 사태, 오스트리아학파 도약의 계기될 것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 모두를 위한 자유는 없다

이선민 뉴욕대학교 학생

◆ 조심스러운 예외?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1]

정말 유럽은 실패했을까

김영준 SFL KOREA 대표

코로나 사태로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여러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마치 유럽과 아메리카의 개인주의가 실패하고 아시아의 집단주의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남게 되리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에 있어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분명히 세계 각국의 여러 싱크탱크에서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복기해볼 것이고, 아마 주류적인 평가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권력에 협조적인 공동체가 위기를 더 잘 헤쳐나가더라 하는 식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 유럽이 공동체주의 아시아에 패배했다는 식의 노골적인 프레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보면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욱 확장을 해본다면 공동체의 생존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마치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실증적인 근거인 양 여기저기서 인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로서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것이 자유주의 내지 개인주의는 해롭고 집단주의 내지 공동체주의는 이롭다는 식의 결론으로 직결될 수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유럽과 아메리카가 실패했고 아시아는 성공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단지 아시아에서의 질병 확산 통제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비해 더 잘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질병이 덜 확산되는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라는 전제가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사태 초기에 세계 각국에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다. 학계는 물론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입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학계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입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었다. 질병 확산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자고 나라 밖과의 모든 통로를 닫아 사람이 오갈 수 없게 되면 국내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 채 아시아는 성공했고 유럽은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를 돌아보면, 답이 그렇게 명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질병 확산

을 성공적으로 막은 아시아가 경제적 손실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비해 훨씬 컸다면, 과연 이를 두고 아시아의 집단주의가 성공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국가 권력이 질병 확산 방지와 같은 목표를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특정한 질서에 복종토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인 판단 하에 그러한 강제가 있었다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그 이전에 우리들 각자가 원해 마지않았던 것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한 강제에 복종함으로써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당연히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의 지도나 강제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잠재적 보균자가 시내를 활보하고 사람이 많은 시설에 출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피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꼭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강제해야만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혹은 자신의 사업장에 감염자가 다녀갔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예상되는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여, 혹은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 같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어떤 공간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되는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공간의 소유자는 질병 확산과 관련된 커다란 위험을 함께 안고 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실제 피해로 실현되었을 때, 자신 혹은 자신의 직원들이 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고객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오길 꺼려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그 공간의 소유자가 지게 된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여 어떤 일을 감수하더라도 그 병에 걸리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병의 확산을 저지할만한 자발적 질서가 자리하게 된다. 만약 앞선 예시에서 대다수의 공간 소유자가 기존과 같이 사람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여 실제로 질병 확산이 잘 막아지지 않는다면, 물론 통상적인 관념에 따르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겠지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최선의 질서다. 그러한 결과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병에 걸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이 저지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주류적인 관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전시적이고 강압적이라 하더

라도 국가 권력이 활약할 필요가 있다는 식일 것이다. 자유주의자로서는 이런 주류적 흐름에 휩쓸려 적어도 이번만큼은 자유주의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합리적인 자유주의자로서 견지해야 할 태도는, 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일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기괴하게 혼합된 새로운 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해본 뒤 확실히 타당한 부분만 취해 기존 우리의 입장과 정합성을 갖도록 잘 통합해내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전쟁이나 대유행병, 천재지변과 같은 거대한 일들도, 우리들 개개인 모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변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

코로나19와 전체주의의 위기, 해법은 어디에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위생과 관련한 의식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 변화 속,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포함하여 많은 방역대책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방역대책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로의 경도 현상은 코로나19의 확산과정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방역대책을 따르지 않은 소수 슈퍼 전파자의 책임이 컸고, 최근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위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클럽과 같은 밀집시설을 이용한 ‘이기적인 개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 과정을 지켜봤다면 공동체의 이익 대신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 결과가,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체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훼손하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조사는 탈법적 요소가 강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집회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었다. 최근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가 확산된 이태원 클럽 일대의 통신기록을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결정들의 원칙 훼손이나, 인권 침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이익에 집중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까지도 박탈하였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였다는 것은 공동체로의 심각한 경도임과 동시에 전체주의 통치의 신호탄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이 중시한다는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인 것 역시 우려스러운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무의식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대한민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이를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하며 소위 K-방역을 칭찬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국가 외 소규모 공동체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체의 해체

는 전체주의의 전형적 통치방식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전체주의는 소규모 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국가로의 공동체 일원화를 추구한다. 국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것을 막고, 오로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만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가조직과 국민 간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확립한 후, 여러 전체주의 장치들을 이용하여 개인을 국가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통치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규모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 개인은 원자적 존재가 아니며 필연적으로 일종의 공동체와 질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개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와 같은 인위적이고 수직적인 공동체가 아닌 자생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의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공동체의 일원화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수준의 인권 침해까지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미 전체주의의 위기는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위기를 타개할 열쇠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

코로나 사태, 오스트리아학파 도약의 계기될 것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흑사병은 시장 경제의 맹아를 키운 밑거름이었다. 중국에서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뒤,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시 죽음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죽음은 잉태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노동력의 감소는 농노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 중세 봉건 제도에 균열을 냈다. 농노들이 도시로 탈출하여 상공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 위에 산업 혁명이 태동한 것이다.

일련의 좌익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흑사병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으로 연명해왔다. 부채는 폭증하였으나, 성장은 그만큼 폭발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기 호황이라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적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통화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멈추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황 능력이 급감하고 있다. 결국 경제 주체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종말을 고할 것이란 게 좌익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현대통화이론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이 이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좌익 경제학자들의 논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이론이 아니라, 통화 발행에 자본주의의 원리를 강화하는 것임이 명징해진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파괴적인 경기 변동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의 고전적인 예시를 떠올려보자. 햇볕이 쨍쨍할 때는 우산 장수가 불황이겠지만, 비가 올 때는 부채 장수가 불황이다. 결국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가 소속된 '경제 전체'는 호황이나 불황의 사이클에 빠지지 않는다.

자유 시장에서라면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코로나 사태가 큰 폭의 경기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수요가 위축되었을 테지만, 음식 배달, 방역 용역, 청소 용역, 온라인 쇼핑 등에서 수요가 폭증한다. 생산 활동 측면에서도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와 위생 용품, 공기 청정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요리 도구, 콘솔 게임기 등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자유 시장에 내재한 변화는 이처럼 개별 산업의 변동을 상쇄하므로, 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을 촉발하지 않는다.

오직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통해 모든 부문에 호황을 일으키려 하거나, 과오투자의 청산을 막으려 할 때에만, 경제 전체가 경기 변동을 겪는다. 자유 시장은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상 투자만이 살아남도록 하는 교환 기제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2001년부터 시작된 Fed의 과도한 통화 팽창으로 인해 시장 수요에 기반 하지 않은 투자, 특히 주택과 중공업 투자가 붕괴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그 원인이 개발도상국의 과잉저축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양적완화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과오투자가 부채로 연명하게 되었고, 그 필연적인 종말을 코로나 사태가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변동은 통화 발행에 자본주의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스스로 부도의 위험을 지는 민간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과오투자가 시장에서 연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행된 엄청난 양의 중앙은행 본원통화를 동결한 뒤,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화폐 수요가 증가할 때 화폐를 적게 발행한 은행은 자신의 은행으로 증거금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화폐 발행을 늘릴 것이다, 증거금이 많음에도 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화폐 발행을 줄이게 된다. 화폐 발행을 줄이지 않으면, 증거금 유출로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은행 제도에서 화폐 발행은 시장의 화폐 수요에 따라 내생적으로 통제된다.

이런 주장은 단지 오스트리아학파를 따르는 학생으로서의 희망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비슷한 사태를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외연을 한층 넓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30년 대공황 사태로 소위 ‘케인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40년간 세계 경제가 저물가 고성장을 경험하면서, 케인스 경제학은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대두하고, 프리드먼과 루카스로 이어지는 새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케인스 경제학의 실패를 논증하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만큼 번성한 것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인 하이에크 역시 경기변동 이론을 통해 케인스 경제학의 실패를 예견한 안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렸다. 따지고 보면 프리드먼이 물가 안정을 중시한 것도 하이에크의 이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하이에크와는 달리 케인스 경제학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쳐, 발전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재밌는 부분은 당시 좌익 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분석하던 태도에 있다. 이들은 그 원인을 석유 파동에서 찾으려 하며, ‘자원의 고갈’에 주목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 이

러한 자원 고갈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황을 코로나 사태의 탓으로 돌리며,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를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의 종말론은 사이비 종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이나 현대통화이론은 도입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재난소득 지급이나 양적완화의 경우 항구적인 정책이라고 민간이 기대하지 않기에, 재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나 화폐 수요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보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은 도입 시 항구적인 정책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가 대두하는데 걸린 시간이 40년, 지금은 다시 그 후로 40년이다. 오스트리아학파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4]

모두를 위한 자유는 없다

이선민 뉴욕대학교 학생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화폐가 되려면 교환의 매개, 회계 단위, 가치 저장, 그리고 지급의 기준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그중 제일 중요한 조건은 교환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 시장 참여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화폐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화폐로 거래할 때 특화가 가능해져, 물물교환을 했을 때보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상품들 - 화폐, 어음, 채권, 주식, 펀드 등 - 은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해 우리의 삶의 질을 운택하게 해준다. 당장은 자본이 없지만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예비 농부가 은행이란 금융 중개인을 통해 대출로 경운기를 사 농사를 지어서 이자를 포함해 상환을 하면, 은행은 그 돈으로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준다. 위와 같은 크레디트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경제가 성장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 자본주의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 73차 세계 보건총회 초청 연설에서 강조한 '모두를 위한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억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권위적인 중앙집권적 정책들의 특징은 개인 간의 신의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 행동과 사상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자가 격리와 확진자의 동선 공개,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이 일례에 해당한다. 마스크 배급과 재난지원금, 추경이 남발되는 확장 재정 기조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인을 믿지 못해 비롯되는 권위주의적 정책이다. 정부에서 볼 때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사재기)나 자원 배분(기부)이 마땅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문제는 계획 경제와 중앙집권적 규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핸드폰으로 시민들의 동선을 추적하면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는 개인들이 생긴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정된 업체에서만 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면,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화하는 소위 '현금 깡'이 자행된다. 이러한 행정 규제 위반 행위들을 형사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물을 수 있다. 과잉 범죄화 및 범죄자 양산은 노동인구를 줄이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한다. 미국 가난의 20%가 과잉 범죄화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는 경우 부패가 늘어날 가능성 또한 있다.

결국 우리는 개인 간의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기 중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특성상, 개개인의 위생 관념과 시민의식만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 “시장 거래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도 거래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착취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라스바드의 말처럼 정부발 규제와 통제가 아닌 개인의 신뢰와 자유를 기반으로 한 거래만이 윤리적이며, 효율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5]

조심스러운 예외?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들에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폭리(price gouging)를 단속한다. 이들 조치는 모두 시민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라스바드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 속에 잉태한(conceived in liberty)"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잃게 된다"는 경구로 요약되는 미국 건국자들의 철학과 그것이 배태한 미국의 헌법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들 조치는 모두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단 몇 주 만에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지금의 팬데믹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자유의 선봉 국가로 여겨졌던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 필자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을 무력감 혹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주의를 학문의 영역에서 음미하는 식자들은 코로나 사태 앞에서 "국방이나 치안, 사법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은 부당하다"는 그들의 신념을 도전 받는다. 각자 나름의 사고 실험을 통해 - 그것이 최소국가이든 무정부사회이든- 가상의 자유 사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가 어떠한 원리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어렵פות한 답을 찾았을 수도 있다.¹⁾ 하지만 정작 당장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기 어렵다. 가상의 자유 사회와 현실 사회의 조건은 매우 판이하기 때문이다.

사고 실험 상의 구속되지 않은(unhampered)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의료 기관과 연구 기관들이 매우 유연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기기 및 치료제의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기업들의 역동적인 경쟁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자유 시장에서 소비자 일반과 기업들은 더욱 발달된 보험 시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팬데믹과 같은 위험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료 기관과 연구 기관들은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자원을 관리하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규제의 영향 아래 놓인다. 때문에 의료 시장이 보여주는 상황 통제력과 탄력성은 자유 사회에서의 그것과 괴리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²⁾에서 단기적으로 극한의 상황 통제력과 탄력성을 요구되는 상황³⁾이 닥

1) 물론 이 같은 사고 실험은 학문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정치학의 한 각론으로서 유용하다.

쳤을 때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장기적인 공론화와 준비 과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산업에 손을 온전히 떼는 것이 과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단기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서로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혁신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적응 비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대개 ‘의약품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같이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겠지만, 정부의 일시적인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법도 없다.

요컨대 자유 시장은 장기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 항상 정부보다 우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지만, 개입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자유 시장으로의 ‘급격한’ 이행은 단기적으로 변화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평시에는 이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팬데믹과 같은 비상 사태에는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사태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리(utility)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정책 조합의 내용이 반드시 동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 도입하고 있는 온갖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모두 정당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조치들은 형편없는 정책 조합이며, 비상 사태를 빌미로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태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기구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화학물에 대한 긴급사용허가(EUA)를 CDC에게만 주었고, 진단 검사 자체도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고집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의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상의 내용은 자유주의적 개혁의 동학(dynamics)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주의 이론 자체에 대한 타협과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극한의 상황 통제력과 탄력성”이 필요 없다고 여기거나, 공리주의가 아닌 의무론적(deontological) 윤리관을 전제한다면 무의미한 논의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숙고하여 판단한 최선 혹은 차악의 정책 조합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정부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관성을 위해 이 같은 동학 이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같

2)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의료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개입이 매우 두텁게 상존하는 현실적 조건을 일컫는 것이다.

3) 단기적인 상황 통제력과 탄력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하의 문제 의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닥쳐도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지는 의문이다.

은 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사태 타개’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국가의 권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라는 가치에 추상적으로 호소하는 방식보다 더 시의성(relevance)과 호소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